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환상

김 욱
배재대학교 교수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야당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제왕적 대통령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이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적인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은 절대적 힘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과 의회 간 구조적 분리이며, 또한 이 분리된 두 기관이 정책 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늘 국회의 견제를 받게 돼 있으며, 국회의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내각제 하에서 수상이나 총리가 의회의 협력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대통령제의 성패는 대통령-의회 간 협력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누리던 제왕적 권한은 민주화가 되면서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졌어도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에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여전히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행사하는 공천권이다. 이 두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이 두 권한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여전히 중요한 당근임에 틀림없지만, 최근 총리 및 장관 임명 동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고유 권한 또한 상당 부분 국회, 그리고 여론의 견제를 받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의원 공천권은 실로 엄청난 권력이며, 비민주적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력 또한 점차 줄고 있다. 3김(金)이 물러난 이후 정당 구조가 과거에 비해 점점 분권화되어 가고 있으며, 단임제 하에서 레임덕 현상의 조기화로 인해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총선 때 임기를 1년 반 남겨 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실패할 수밖에 이유는 바로 정치 현실과 기대와의 커다란 격차에 있다. 많은 국민, 언론, 그리고 심지어 정치엘리트조차도 대통령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실 하에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감소를 경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향후 한국 대통령제의 올바른 개혁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 약화가 아니다. 이미 대통령의 힘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제한적이며, 국회의 힘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 양자 간에 견제와 함께 동시에 협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 힘의 약화가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 간 연결고리의 마련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중임제의 도입을 통한 레임덕 현상의 완화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당정치의 발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민주적으로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당을 연결고리로 대통령과 국회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해서 당장에 시급한 것은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법조칼럼

# 범죄예방과 소년 상담

조 정 호
광주지검 검사

최근 범죄예방에 관한 흥미로운 언론 기사를 접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장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화에서는 최첨단 범죄예방 시스템인 '프리 크라임'(Pre-Crime)이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한다. 그런데 현재 미국 경찰에서 과거 범죄정보를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범죄의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는 범죄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범죄 유형과 범행 시간 등을 토대로 경찰에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을 미리 알려줘 경찰이 그 지역에 출동해 용의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로스엔젤레스 경찰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강도, 절도 발생률이 20% 정도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범죄예방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범죄라는 결과 발생의 직전 단계에서 이를 외부적으로 차단할 뿐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한 대처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함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사람마다 내재된 범죄에너지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동기 자체가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하기에는 청소년기가 적기이다. 일반적으로 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비행에 빠지기도 쉽지만 교정 또한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훈계만으로는 어렵다. 지난 20년간 소년 인구는 줄었지만 소년사건(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의 범죄)이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더라도 그렇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14세 때부터 끊임없이 검찰청에 드나들다 처음으로 구속된 17세 소년범을 고심 끝에 풀어준 적이 있다. 그 소년은 내 앞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테니 제발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나름의 진정성이 엿보였고 그 어머니도 간절히 원하여 다시는 검찰청에 오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홀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다. 그 아이가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고, 결국 그 소년은 붙잡혀 또 다시 검찰청에 오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회성 훈계만 하였을 뿐 범죄로 나아가게 된 원인인 '결손'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다. 나의 처분은 그 소년이 범죄로 접어들기 전과 똑같은 환경으로 돌려보낸 것에 불과했다. 소년과 어머니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궁핍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 검사 앞에서의 다짐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가보다.

가정의 달 5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상담위원실을 연다. 상담 대상은 주로 소년범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법사랑위원(구 범죄예방위원)연합회 등으로부터 전문 상담위원으로 봉사할 분들도 추천받았다. 범죄를 저질러 검찰청까지 오게 된 소년범과의 진지한 상담을 통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재범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무엇일지 다각도로 모색해 보기 위함이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연을 주선한다. 집이나 공부방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술치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도울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구성원 모두의 몫이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담위원실 운영과 청소년 보호·지원을 통해 단 한 명의 소년범이라도 재범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을 비행과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장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면 검찰에서의 소년 상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범죄예방의 첫걸음일 것이다.

기 고

#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장 헌 권
목사·시민상주 모임

참사1주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슬픔과 절망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 아니 추모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보내는 가족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시간이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요즘 물리적인 학대를 서슴치 않는 경찰이다.

거기에 시민들의 추모행사에 대하여 경찰은 작심이라도 한 듯 초강경이다.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는 그토록 무능하고 비겁한 정권이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슬픔과 애도를 짓 밟고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난사하고 있다. 구조에는 무능한 정부가 진압에는 잔인한 정권이다.

필자는 광화문 집회에 몇 번 참석을 했다. 애초 경찰이 무리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대치나 충돌은 없었을 것이다. 가족이나 시민은 평화롭게 추모와 함께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안되며 조사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국민 600만명 서명과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자리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것에 대한 검증수준이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 거기에 사무처의 위원회 정원도 법률상의 정원보다 30명이나 줄어든 90명으로 출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상조사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국민과 유가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또한 시행령은 위원회의 핵심인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 총괄담당관 역시 부이사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없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다.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겠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슬픔과 분노의 의미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세월호 지우기 전략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4.16 지킴이를 통해서 기억과 행동의 약속을 했다. 서로 놓치지 않는 끈을 만들어 소통하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기다림과 외침과 기록과 치유가 되는 약속 지킴이다. 그러나 기억 행위에 비해 삭제와 지우기 행위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화문 앞에서 노숙 농성중이던 유가족을 경찰이 연행을 하고 유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 나선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차벽을 세우고 있다. 바로 '근혜 산성'이다.

생때 같은 자녀를 잃은 어미에게 물대포를 쏘면서 공권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겁박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발령되는 만큼 시행령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통이다. 묵묵부답이다. 이것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체마저 부정하는 태도다.

정부는 시행령안을 당장 철회 해야 한다. 글자 몇자 바꾸는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엉터리 시행령을 조속히 폐기 하고 특별법의 근본 취지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실현에 기여 할수 있는 제대로 된 위원회가 출범하도록 해야한다. 아무리 민심을 막는 근혜산성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향한 권리, 안전한 권리와 인간으로서 최소한 의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社 說

# 광주U대회 축제 모든 시민이 관심 가져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U대회는 호남권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적인 종합스포츠 제전이다. 무엇보다도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져 선수와 운영진만 해도 170개 국 2만여 명이 광주를 찾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와 대회조직위원회는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 도로시설, 대회기간 교통대책, 음식·숙박업까지 세심한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가 대회 성공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본보가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회기간을 7월이라고 답한 시민이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연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50%에 이르고 대부분 단순한 대학생들의 행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무관심 탓인지 애초 12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한 자원봉사자가 절반인 6만 명 접수에 그쳤다. 시민서포터즈 5만 명 모집 캠페인도 벌였으나 3만6000명을 모으는데 불과했다. 광주시와 조직위의 노력 부족 탓이 크겠지만 근본적으론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U대회는 광주의 역사에 남을 전무후무한 스포츠 이벤트이자 광주시민의 축제다. 세계인이 몰려오고 지구촌의 시선이 모두 광주로 쏟아지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외면한다는 것은 축제의 장을 만들고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 도리가 아니다.

광주라는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회기간 동안 기초질서와 공공장소 예절 지키기는 물론 양보와 나눔, 그리고 봉사정신은 광주시민이 발휘해야할 기본 자세다. '1가족 1종목 이상 관람하기' 등 지역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티켓 구매에도 적극 나설 것을 권한다.

#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되레 악취 풍기다니

700억 원을 들여 건설된 광주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 1년 여부터 법정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악취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은 기준을 위반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의 개선 노력에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해 10월 1일 악취방치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보다 4배 이상 초과한 2080의 악취 물질을 배출해 왔다고 한다.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 서구청이 시설 개선 권고를 내린 후 지난 4월 13일 진행된 2차 측정 결과도 희석배수 2080을 기록했다.

무려 6개월간 배출구 필터 교체, 악취 저감 약품 변경, 배출구 내부 세정, 먼지 필터 교체 등을 했지만 기준치가 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악취 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면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가동 전 시설 검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악취 배출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시설을 지은 현대건설, 남광건설과 운영·관리 감독 주체인 광주환경공단, 광주시 등이 8개월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악취를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시설이 들어서 있는 치평동 일대 주민들은 연일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악취 물질 배출을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이 법을 장기간 위반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에 나서 하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에 대해서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직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니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 봄날은 간다

화려한 봄날이 속절없이 가고 있다. 이즈음에 모두들 즐겨 부르는 노래. 애잔한 멜로디와 정감 어린 노랫말이 가슴을 파고드는 마력이 있는 노래. 듣거나 부를 때 까닭 없이 눈물이 나는 노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1950년대 백설희(1927~2010, 가수 전영록의 어머니)가 불러 공전의 히트를 쳤던 노래. '봄날은 간다'는 불후의 명곡이다. 처음 노래가 나온 이후 60여 년 동안 김정호·장사익·조용필 등 무려 20여 명의 가수가 다시 부르기도 했으니.

연분홍 치마와 봄바람, 산제비와 성황당 길, 새파란 풀잎과 꽃편지…. 노랫말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정감 어리지 않은 말이 없다. '봄날은 간다'는 그대로 한 편의 시(詩)다. 희대(稀代)의 절창이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봄날에 느끼는 절절한 정회(情懷)를 잘 표현했다.

그러고 보면 작사가 손로원(1911~1973)은 뛰어난 시인이었음이 분명하다. 시인은 혹시 실연(失戀)의 상처를 되새기며 이 노래를 만든 것은 아닐까.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피면 같이 울던' 옛 연인을 생각하며 가는 봄을 아쉬워한 것은 아닐까. 흔히들 이 노래를 '젊은 날의 사랑에 대한 정한(情恨)의 표출'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란다.

작사가 손로원에게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시집오면서 입었던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고이 간직했다. 나중에 아들이 장가드는 날 입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그 예쁜 옷을 다시 입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화가이기도 했던 손로원은 피란 시절 부산 용두산 중턱 판잣집에 살았다. 한데 어느 날 판잣집에 불이 나고,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던 어머니의 사진마저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짓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여성 의원이 이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다. 최고위원끼리 치고받고 싸운 직후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였다는데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왜 야당은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지 못하는 걸까. 왜 '꽃이 피어도 꽃이 져도' 늘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것일까.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 치 부 2200-642 |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체 육 부 2200-697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